"균형발전 전제된 재정분권 추진을"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서 "지방소비세율 10% 인상 증가된 재원 배분방식 조정"

지방재정분권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고 증가된 재원의 배분방식을 조정해 시도 간 재정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은 21일 대구에서 열린 2019년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균형발전이 전제된 재정분권 추진 건의안'을 통해 "재정분권은 지방의 재정문제를 해소하면서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이루는 핵심 사안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장은 "우리나라의 중앙과 지방 세입 비율은 약 7.5 대 2.5이지만 재정 지출 규모 비율은4대6으로 심각한 불균형과 중앙정부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정부는 현재 4%인 지방소비세율을 6% 추가 인상함으로써 지방의 재정난을 해소하면서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하겠다는 목표도 조기에 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송성환 의장은"지방소비세를 10% 인상할 경우 순증규모는 8조5천억원에 달하지만 시도별 세입금액을 시뮬레이션 해보면 서울과 경기 경북, 부산. 경남 등 5개 시도에 53%인 4조5천억원이 배분되고 우리 전북은 4,574억원에 불과하다"며 "재정여건이 불리한 낙후지역이 더 많이 배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 지역별 배분 가중치 상향 조정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지방재정확충과 연계된 정부기능 지방이양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지방비 매칭으로 인한 지방비 부담이 커져 지역간 불균형심화가 예상된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차별받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배분 받게 함으로써 재정격차를 형평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다자녀가구 국가장학금 역차별 시정 건의안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건의안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성능 개선 사업 중단 촉구 건의안 등을 채택해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김진성 기자

"천안논산고속 통행료 4900원으로 인하 가능"

안호영 의원 · 강훈식 의원, 통행료 인하방안 간담회 개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높은 통행료를 받아 논란이 제기돼왔던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가 현재 9,400원에서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최대 4,900원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과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천안논산고속도 통행료 인하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자고속도로인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통행료는 현재 9,400원으로, 한국도로공사 관리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인 평균 4,500원 보다 2배 이상 높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전북도민 등 그동안 천안논산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강한 불만과 함께, 통행료 인하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안호영 의원도 2017년 국정감사에서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그 이후에도 국토부와 통행료 인하 방안을 협의해 왔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을 연구한 결과를 청취하고 합리적인 통행료 인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식인 자금재조달이나 사업재구조화 방식으로는 월등히 높은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일반 재정 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다 다양한 인하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했다.

안호영 의원은 간담회에서 현재 일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수준의 2.1배에 달하는 통행료(9,400원)를 재정 고속도로 수준으로 요금인하를 추진하도록 요구했다. 안호영 의원은 만약 재정 고속도로 수준으로 요금인하를 한다면 민자사업자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분(10%)을 고려할 때 일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수준의 1.1배인 4,900원까지 인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천안논산고속도로의 통행료 인하를 위해 협상단을 구성해 민간사업자 측과 세부협상에 착수했으며, 이날 간담회에서 개진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사업자 측 협상단과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협상이 완료되면, 유료도로법 개정, KDI 적정성 검토, 기재부 협의 및 민투심 심의, 변경실시협약 체결 등 법적·행정적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통행료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호영 의원은 "전북을 포함한 호남 주민들의 천안논산고속도로의 과도한 통행료는 부당한 차별이자, 주민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바가지 고속도로'나 마찬가지였다"며 "전북도민 등 국민과 국회의 요구가 반영되어 통행료 인하가 추진되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를 통해 전북 등 호남인들의 고속도로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경제적 비용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경기도 부천 유한대학교에서 열린 2018 학위수여식을 마친 후 졸업생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문 대통령 "자신감만은 꼭 가슴에 담아달라"

부천 유한대 학위수여식 참석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앞선 세대가 이룩해 놓은 것들을 해체하고 새롭게 융합하는 창의적인 사고가 4차산업혁명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부천의 유한대학교 졸업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세계는 이미 새로운 인재, 창의적인 인재에 열광하고 있다. 젊음 그 자체가 4차산업혁명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신선하고 발랄한 생각,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삶의 일부가 된 ICT 기술과 문화는 기성세대가 갖지 못한 능력"이라며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경쟁력이고, 감수성도 경쟁력이며, 공감능력도 경쟁력"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청춘의 시간을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저의 청년 시절을 되돌아보면 희망이기도 하고, 고통이기도 한 시간이었다"며 "인생에 대한 회의가 가득 찬 때도 있었다. 인생에 정답이라는 게 있다면, 누군가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고 지난 날을 돌이켰다.

그러면서 "졸업장을 쥐고 막 교문을 나서는 여러분의 마음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하리라 생각한다"며 "더구나 여러분이 맞이할 미래는 과거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다. 저 역시 여러분께 답을 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인생을 대하는지, 어떤 인생 경로를 걸어가는지는 각자의 선택"이라면서도 "'얼마든지 기성세대에 도전하고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만은 꼭 가슴에 담아달라고 말하고 싶다"고 조언했다. /뉴시스

전북도의회 의정 중계석

김명지 "도내 보건교사 차별없이 배치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명지(전주8) 의원은 21일 제360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도내 보건교사 배치에 차별을 둔 전라북도교육청의 현행 시스템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큰 목소리를 냈다.

이는 학교보건법상 중등학교 보건교사 배치기준이 9학급 이상의 학교임에도 도교육청은 공립 중등학교에만 적용하고, 사립 중등학교는 18학급 이상의 대규모 학교를 배치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김명지 의원은 "획일적인 보건교사 배치가 아니라 지역별, 학교급별, 학생수에 적합한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현 도교육청의 보건교사 배치기준은 수정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도내 보건교사 배치현황 자료 분석 결과, 도내 중학교 보건교사 배치율은 44%로 도내 전체 배치율 61%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김진성 기자

김만기 "동학혁명 무장포고문 낭독 포함해야"

올해부터 추진되는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에 반드시 무장포고문을 낭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김만기 의원(고창2·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제360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에 반드시 동학농민혁명의 시작과 정당성을 부여하는 무장포고문을 낭독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우리나라 근대 민주화 운동의 시초인 무장기포지의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전봉준 장군 생가터를 비롯한 동학농민혁명 유적지를 문화재로 등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국주영은,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확대 건의안 발의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9)이 21일 제360회 임시회에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확대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하고 있는 'LPG 배관망 구축보급사업'은 조사대상의 84%가 만족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수요대비 공급이 극히 부족한 상태이며, 특히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2019년 기준 전국 200여개의 마을(전북 44개 마을)에서 신청했으나 공급지역은 30개 마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을 요구하는 한편, LPG배관망 지원사업을 도시권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까지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2019년 현재 도시가스 보급이 80%에 이르고 있다고 하지만, 강원도와 전남은 전체가구의 50% 이상이 LPG를 사용하고 있고 전북을 비롯한 충청, 영남지역은 30-40%의 가구가 LPG를 사용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